

◇오인철대한건설협회 도회



장은 30일 오후
5시 홍천군을 방
문해 허필홍 군
수에게 불우이
웃돕기 성금을

전달하고 지역 회원사 간담회
를 개최.

건설현장 동절기 안전점검

조달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
지 전국 3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
동절기 재난사고 대비 특별 안전점
검을 실시한다.

이번 점검은 올겨울 한파·폭설로
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
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. 도내의 경
우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시옥
이 대상에 포함됐다. 점검 내용은 유
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, 공사
가설물 안전 여부, 임시전력 사용 상
태 등이다. 윤종현기자 jjong@



홍천군 일반건설협 연탄 기탁 홍천군일반건설협의회(회장 장관영)는 29일 홍천군청을 방문해 허필홍 군수에게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5000장(300여만원 상당)을 기탁했다.

건설업 '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' 빠르게 정착

99%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“관행 개선” 평가도 92%로 꺾충

〈작년 응답비율 56%〉

공정위, 2018 서면 실태조사 결과
현금결제율도 제조업 크게 웃돌아
부당특약 설정 관련해선 개선 필요

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9%에 달하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도 전업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건설업종에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건설업종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하도급업체의 응답도 1년 전 50%대에 그쳤으나 올해는 90%대로 급상승했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'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' 결과를 발표했다.

이번 조사는 제조, 건설,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량이 많은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.

조사결과를 보면,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도급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.0%로 나타났다. 지난해 86.9% 대비 7.1%포인트 상승했다.

특히 건설업종에서는 91.8%에 달하는 하도급업체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해, 전년도 55.9% 대비 35.9%포인트 급등했다.

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하도급 불공정 근절 종합대책 등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건설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서 건설업종의 공정한 거래문화가 빠르게 정착됐다고 평가했다.

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서도 건설업종은 두드러졌다.



전체 하도급대금(113조6088억원) 중 현금결제비율은 62.5%(71조539억원)에 불과했으나 건설업종(30조1880억원)의 현금결제는 74.8%(22조5764억원)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이는 제조업종의 현금결제비율(56.1%)보다 18.7%포인트 높고 용역업종(73.6%)보다도 높은 수치다.

이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건설업종은 92.1%에 달해 전체 평균 90.5%를 상회했다.

공정한 하도급거래의 기초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도 건설업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.

건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98.9%로, 전체 평균 75.6%를 크게 앞질렀다.

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76.1%였고 용역은 59.1%에 그쳤다.

다만,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.

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

조건을 설정당한 경험이 있다는 하도급업체의 응답은 2.5%로 전년 2.2%보다 0.3%포인트 상승했다.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이 1.3%로 가장 낮았고 용역업종은 2.1%에 그쳤으나, 건설업종은 7.0%로 조사됐다.

공정위는 이와 관련, 부당특약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

또한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이나 대금 부당감액 등 단 1건이라도 범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개로 확인됐으며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올해 첫 조사가 시행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전속거래 실태를 보면, 전체 60개 집단 1058개 회사 중 42개 집단 소속 143개사(22.3%)가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중 건설업종은 14개사가 전속거래를 하고 있으며, 전속거래기간은 △3년 미만 22.2% △3~5년 미만 33.4% △5~10년 미만 11.1% △10년 이상 33.3% 등으로 확인됐다.

전속거래 이유로는, 건설업종 원사업자는 모두(100%) 품질유지를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, 하도급업체는 72.2%가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서라고 답했다. 원사업자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은 16.7%로 나타났다.

또 전속거래 원사업자의 범위반 혐의 유형을 보면, 부당 경영간섭(39.4%) 비율이 가장 높았다.

건설업종 부당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유형으로는 '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·승인'이 66.7%로 가장 많았고, '생산 품목이나 생산량 간섭행위'(33.3%)가 뒤를 이었다. 봉송권기자 skbond@